

교육감들 “지방교육재정 개편, 교육자치 훼손”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공식 협의체 구성 등 촉구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 보이콧… 공동 대응 예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며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고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담은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려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같은 개편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의회는 특히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협의회는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의 동일한 비율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육인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개편 효과로 제시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 전망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등이 상승하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줄어 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교부금 총액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변경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제 2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개편안에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담은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정부에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와 안정성 및 미래교육 수요 등에 대한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시·도교육감과 실질적인 협의 없이 교부금 개편을 추진할 경우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첫 조치로 25일 예정된 시·도교육

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감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한 채 실무자에게 정부 방침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방식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교육감을 단순한 정책 집행기관으로 취급하거나 교육자치를 존중하지 않는 정책 결정이 이어질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단체와의 연대를 확대하고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미래교육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정부가 교육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할수록 16개 시·도교육청의 공동 대응도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최종 성과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를 앞두고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마지막 점검에 나섰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25일 본청 5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3차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9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최종 실적 제출을 앞두고 올해 추진한 반부패·청렴정책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청렴정책 추진과제 평균 이행률은 82.1%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 1차 점검 당시 54.0%보다 28.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목표율 100% 달성한 완료 과제는 상반기 3개에서 현재 20개로 늘어 나며 청렴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교육청이 3대 부패취약분야로 선정한 △학교운동부 △갑질 △조직문화 △일반·교원 인사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됐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운동부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익명 신고망을 상시 운영하고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통제체계를 강화해 왔다.

갑질 없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한 '역지사지 역할극'은 현장 만족도 98.2%를 기록했다. 누리집을 통한 갑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에도 900명이 참여하는 등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9월 말 국민권익위원회 실적 제출 전까지 모든 청렴정책 과제의 이행률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11월까지 진행되는 내·외부 청렴체감도 설문조사에 대비해 교육 현장의 불편과 개선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등 도민과 교육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청렴은 전북교육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도민들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최우선 핵심 과제”라며 “남은 기간 모든 부서가 합심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올해 반드시 '종합청렴도 1등급' 도약이라는 목표를 이룰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오상근 기자



전주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는 지난 24일 전주시 덕진구자율방범연합대와 함께 학교 주변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야간순찰을 실시했다.

학생 안전환경 조성·학교폭력 예방 힘 보내

전주시 학운위원장협, 자율방범대와 합동 야간순찰

전주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가 지역 자율방범대와 함께 학교 주변 야간 순찰에 나서며 학생 안전환경 조성과 학교폭력 예방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전주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회장 김용일)는 지난 24일 전주시 덕진구 자율방범연합대(연합대장 정연후)와 함께 학교 주변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야간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순찰은 오후 9시부터 10시 30분 까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전주교육지원청을 출발해 전주중앙중학교와 전주진북초등학교 등 학교 주변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하며 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점검했다.

특히 전주시 덕진구자율방범연합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학교 주변 안전 취약지역을 살펴보고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김용일 전주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은 “학교 주변의 안전은 학교와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야간순찰을 계기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오상근 기자

지역 보건·환경 분야 현안 대응

우석대-전북보건환경연구원

우석대학교와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역 보건·환경 분야 현안 해결과 연구 협력을 강화한다.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5일 전주 캠퍼스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지역 보건·환경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우석대학교 정희석 산학협력처장과 송창대 교수,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전경식 원장과 이광수 토양환경과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산학협력 관련 기술·경영 자문 △공동연구 주



진 △지역 보건·환경 분야 현안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토양오염분석센터가 보유한 전문 역량과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분석 역량을 연계해 지역 보건·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와 기술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오상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형 민주시민역량 지표 개발 ‘속도’

전북교육청, 도내 초중고 학생 7473명 자료로 예비문항 진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의 민주시민역량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전북형 민주시민역량 지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전북형 민주시민역량 지표 개발을 위한 1단계 실증연구인 예비문항 진단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가 수준의 학생 민주시민역량 지표 개발과 연계해 전북 학생들의 실제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예비문항의 적절성과 작동성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됐다.

교육부는 올해 학생 민주시민역량 지표 개발과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2027년 학생 표집평가, 2028년 이후 단계적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내외 선행연구와 국제적 논의, 국내 교육과정, 전문가 합의 및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안한 민주시민성 6대 지표 체계를 후보 준거틀로 활용했다.

연구진은 △공공선과 공동체적식 △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문화다양성과 공존 △지속가능성과 상상 △의사소통과 민주적 의사결정 △비판적 사고와 리터러시 등 6개 영역과 교육목표 3대 영역인 지식·이해, 기능·실천, 가치·태도를 바탕으로 총 30개의 예비문항을 구성했다.

이를 토대로 도내 초·중·고 학생 7,473명의 응답자료를 분석해 예비문항을 진단했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은 한국교육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교육학연구'에 게재가 확정됐다.

대규모 학생 자료를 활용한 예비문항 진단 결과가 학술적 검토를 거쳐 연구성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향후 지표 개선을 위한 학술적·실증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이번 연구는 교육청과 현장 교원이 함께 추진한 정책연구가 학술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연구진은 배성은 전주신동초 교사가 제1저자, 김중영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가 제2저자로 참여했다.

전북교육청은 1단계 양적 진단 결과와 학생 인지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델파이와 최종 문항 개선을 거쳐 2027년 2월에 지표를 확정할 계획이다.

델파이는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익명으로 반복 수렴하고 피드백에 합의된 판단을 도출하는 연구방법이다.

이어 2027년 3월에는 도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과 교원 연수, 민주시민교육 정책을 정교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미정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예비문항 진단 연구와 학술지 게재는 전북형 민주시민역량 지표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학생들의 민주시민역량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민주적 참여 기회와 교육 여건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의 민주시민교육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오상근 기자

학생 국제개발협력·사회공헌 활성화 ‘맞손’

전주기전대-굿네이버스 전북, 봉사 실천 인재양성 협약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전)이 재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나선다.

전주기전대학은 지난 24일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와 국제개발협력 및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주기전대학의 인재상인 “봉사를 실천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재학생들에게 지역사회는 물론 국제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세계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국내외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나눔문화 확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지역역



신을 위한 공유·협력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전주기전대학은 KOICA 대 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재학생을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과 해외 현장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굿네이버스가 보유한 국제개발협력 현장 경험과

대학의 교육과정을 연계해 학생들의 공적개발원조(ODA) 실천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제개발협력 교과목과 NGO 현장활동을 연계하고, 학생들이 ODA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이해하고 실제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전주기전대학 KOICA&해외봉사센터 김기현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이 교과목에서 배운 국제개발협력의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굿네이버스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재학생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사전예고제 시행 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특수학급 설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28일 창조미래 회의실에서 '2027학년도 특수학급 설치 사전예고제 시행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특수학급 설치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 내용을 안내해 학교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학교가 특수학급 설치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와 2027학년도 특수학급 설치 사전예고 대상 학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교육청은 설명회를 통해 △특수학급 설치 필요성 △설치 업무 추진 절차 △지원 예산 △특수학급 환경 구성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학교장들이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까지 사전예고제 대상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교별 여건과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53개를 신·증설했으며, 현재 도내에서 모두 885개의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특수학급 신·증설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2027학년도 특수학급 신·증설 설명회 △특수학급 설치 안내서 제작·배포 △특수교육 대상자 상급학교 수요조사 △특수교육 대상자 정보관리 및 배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오상근 기자